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4. 4. 1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4년 4월 11일(목) 14:00~16:46

2. 회의방식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66호

이 윤 수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4년도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4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66호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사실관계에 대해서 하나 여쭙어 보겠음. 첫 번째, 녹취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동기를 보면 ‘녹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녹취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아예 녹취시도를 안 했다는 것인지?
- (보고자) 이것이 파생결합증권(DLS)이고 이분들의 투자등급

이 위험 1등급으로 공격투자 대상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 투자자임을 설명 드렸음. 그런데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법규상 녹취를 해야 되는데 그 녹취를 하지 않은 것임. 아마 직원의 실수로 그런 부분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

○ (위원) 문맥상으로는 자칫 녹취를 시도했는데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오인이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3건 전부 내방고객들에 대한 판매과정이었고, 고객이 내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녹취를 위해서 별도로 녹취형 통화기를 통해서 녹취를 해야 하는데 녹취기능이 없는 전화로 통화를 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녹취의무 대상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취사실에 대한 확인 자체를 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

○ (위원) 통상적으로 금융회사 직원들이 업무상 통화를 하면 그 내용이 다 녹취가 되는데 이 업무를 본 전화기는 녹취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일반적인 내선전화임.

○ (위원)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그래서 녹취 사실 자체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

임.

-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이 5건인데 일괄적으로 광고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 요건이 충족 안 된 대상자가 있었던 사안인지?
 - (보고자) 일괄적으로 보낼 때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이라든지 이런 요건을 갖추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았고, 또 그 내용 중에 원금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보낸 사항임.
- (위원) 사모니까 투자자가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고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누락했는데 이것이 총 5건이라고 되어 있음.
 - (보고자) 5건이 아니고 달성한 횟수가 5건이고 전체 대상자는 한 2,900명 정도 됨. 보낸 건수 기준으로 과태료를 산정함.
- (위원) 그러면 1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100명이든 단건으로 되는지?
 - (보고자) 맞음. 기존의 조치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 행위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음.
- (위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그것은 향후에 한 번 고민해 볼 부분이 있음. 왜냐하면 투

자광고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이 보내는 사람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고민을 해 보면 좋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67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은행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제가 하나 여쭙볼 것이 8페이지에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수령과 관련해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가 있는데 위반행위 결과가 ‘보통’으로 되어 있고, 그 사유가 ‘금융거래자에 대한 피해가 없고 언론에 공표되지는 않았으나 중소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의 결과는 “보통”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7페이지 하단에 ‘중대’로 판단할 때의 요건 중 세 번째를 보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 ‘중대’로 판단해도 될 만한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보통’으로 하신 이유가 있는 지?

- (보고자) 과거 제재사례에서 보면 해외 골프 접대 여행을 하거나 가족들의 여행경비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중대’로 했음. 그다음에 DLF 제재할 때 하나은행이 증권사로부터 호텔에서 지금처럼 PB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했을 때 스테이크 식사코스나 몇 명에게 고가의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음. 그때도 비슷하게 결과에 대해서 ‘보통’으로 판단한 바가 있어서, 본 사안에 대해서 중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통’으로 산정했음.
- (위원장) 골프나 식사처럼 같이 무엇을 즐기는 것과 상품권은 사실 현금과 비슷한 것인데 이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전용(專有)해서 하는 것은 질이 안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
- (보고자) 당초에 호텔상품권을 수령할 때 나름 우수직원과의 식사에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했었는데 향후 이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주로 영업 관련해서 상대방 거래처나 자산운용사 직원들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음.
- (위원장) 금융위 담당 과에서 따로 하실 말씀 있는지?
- (보고자) 이번 건의 사용처가 어쨌든 사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중대’로 볼 것인지 ‘보통’으로 볼 것인지는 얘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여쭙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수령한 상품권을 우수직원과의 식사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계속 유지되어 집합적인 식사가 어렵자 부서에서 별도 보관하면서 부서장(○○○○)이 수시로 임의 사용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의 사용하였다는 부분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완전히 사적사용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정확한지? 예를 들어 자기 물건을 산다거나 자기 가족들과 같이 호텔에서 숙박을 한다거나 했는지?

- (보고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은행 조사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감봉3월'의 조치를 하고 이분은 이미 퇴사를 했음.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사용부분이 미심쩍어 검찰에 정보사항으로 통보를 했는데 지난주에 '혐의 없음'으로 해서 통보를 받았음. 그때 사용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로 거래상대방, 자산운용사나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유튜브나 직원들, 이런 식으로 함께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었음.

○ (위원)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임. 그러면 저희가 담당직원이 이런 위규 행위를 했을 때 위반행위의 결과와 관련하여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양정기준이 물론 있지만, 예를 들어 기관이 그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한 점이나 그런 행위가 드러났을 때 시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된 것인지?

- (보고자) 저희들이 자진신고나 예방노력 또는 사후에 치유한 내력은 과태료 감경사유로 보통 감안을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은 해당이 안 되었음. 사후적으로 발견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검사 가서 개선사항으로 재산상 이익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사항으로 지적한 바 있음.

○ (위원장) 앞으로 이런 유사 안전이 있을 때 언론에 나왔는지 여부만 사회적 물의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을 안 지킨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에 판단할 때 참고하시기 바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8호 『OOOOOOOO(주)의 분·반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먼저, 자료제출 거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음. 우선, 회사는 경위가 무엇이든 간에 그 조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소통이 매끄럽지 못했고 이 때문에 담당자들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림.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자료 제출이 늦어졌던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회사는 자료제출을 고의로 거부한 사실이 없었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료제출이 다소 지연된 것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도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의 구성요건은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어야 성립됨. 유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그런데 회사는 조사과정에서 요구 받은 자료를 결과적으로 모두 제출했고 또 금융감독원과도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대응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허위진술이 따로 문제된 적도 없었고 조사방해 결과가 생긴 것도 아닌 것으로 파악됨.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됨. 그리고 자료제출거부죄는 형사벌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려면 회사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조사과정이나 자료제출 과정들을 보면 회사가 자료제출 거부를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음. 금융감독원은 2023년 1월 조사 착수한 이후에 회사에 모두 39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음. 그런데 회사는 2023년 8월까지 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4건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 거부로 지적된 3건의 자료를 포함해서 35건의 자료

를 모두 제출했음. 회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대부분을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했음. 다만, 제출이 늦어진 자료 3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전문가인 외부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제출이 늦어진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결과적으로 일부 자료 제출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회사가 의도적으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해아려 주시면 좋겠음. 다음으로 주식거래 회계처리 누락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음. 회사는 2020년 8월경에 기존에 보유 중이던 회사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을 모두 매각했음. 이후에 前재무팀장이 3분기에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 이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음. 그러다가 회사가 2020년 12월경에 이를 인지했고 인지하자마자 연말재무제표에 즉각 반영했음. 즉, 회사가 3분기 주식 취득 사실을 알면서 회계처리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올림. 회사가 회계처리를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함.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회사가 누락한 주식평가손실은 2020년 3분기 전체 순이익의 6%에 불과함. 이러한 주식평가손실을 반영하더라도 분기순이익이 손실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숨기기 위해서 굳이 회계처리 누락에 따른 위험을 무릅쓰고 회계처리를 누락할 이유는 없었음. 그 당시 재무담당임원도 보고누락 사안으로 판단하고 또 그 해 전체를 놓고 보면 주식운용을 통해서 약 88억 원의 이익을 보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인지한 즉시 연말재무제표에 반영해서 공

시하고 前재무팀장은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또 재발방지차원에서 사건 발생 직후인 2021년부터는 모두 외부전문기관에 투자활동을 일임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음. 물론 모든 자금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거나 더 엄격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회사가 고의로 회계처리를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의 의견임. 이상을 종합해 보면 주식거래 회계처리 누락은 고의로 보기가 어렵고 ‘중과실’로 의율함이 더 타당해 보임. 설령, 주식거래 회계처리 누락의 위법동기를 ‘고의’로 판단하더라도 다른 조치 등으로 제재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셔서 검찰고발 통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재무담당 임직원 연락처와 관련해서는 제출요청을 받았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두 달 뒤에 제출을 했음. 그런데 당사자들에게 이런 요청이 있으니까 동의해 달라고 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

▶ (진술인) 그중 일부 인원은 의사를 타진해서 제출한 것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형사고발이 되어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 마찬가지로 협의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음.

- (위원) 2022년 반기재무제표 주석에 재작성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검토자료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 ▶ (진술인) 2월6일에 처음 제출요구를 받았는데 그 이후 2월 13일에 회사 쪽의 다른 법률대리인 자문을 받아 회신문을 준비하고 그것을 제출했음. 그다음 2월15일에 금융감독원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냐, 지연을 요청하는 것이냐?”는 질의를 유선으로 받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이슈(issue)가 있어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3월경까지 금융감독원은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issue)가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3월17일에 의견서를 제출했음. 그리고 이후에는 따로 제출요구를 더 이상 받지 않았다가 6월14일에 다시 23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을 요구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자문을 받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지연이 되다가 8월에 제출을 하게 된 것임.
- (위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일 와 닿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은 자기 계좌로 돈을 출금해서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회사 계좌로 거래를 한 것임. 그리고 그 계좌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직원이 있음. 이 사람은 어떤 유인이 있어서 회사 계좌로 돈을 넣어 거래를 했던 것인지? 회사의 용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지? 심지어 담당 금융회사 직원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음.
- ▶ (진술인) 지금 정확하게 거래(deal)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사 명의로 된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팔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익을 편취할 수 있는 요건은 솔직히 어렵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음.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질을 하고 싶지만 이 내용 자체를 알게 된 것도 저희가 늦게 알게 되었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

- (위원)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횡령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함. 회사 계좌에 돈을 넣어서 횡령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회사 입장에서 회사에 유인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 개인적인 불법행위라고 보기에, 이 사람은 과연 이 일을 왜 했을까, 그리고 관련자들이 계좌를 항상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 와 닿지 않아서 질문 드리는 것임. 이것은 누군가의 용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지? 하나만 더 여쭙어 보겠음.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그렇게 했음. 그 직원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임. 상장 회사에서 손실이 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 (진술인) 사실 이것은 전반적인 내부통제의 문제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음.

- (위원) 그렇게만 볼 수 있는지? 내부통제로 얘기하면 다 되는 것인지?

- ▶ (진술인)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다 동의함. 하지만 그 당시에 이 계좌를 정리하라고 했을 때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공개되었을 때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손익은 대략적으로 한 5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해 있는 상태였음.
- (위원) 이 사람이 본인 돈을 본인 계좌로 보내서 운용을 한 것이 아니지 않은지? 회사 돈을 회사 계좌에 넣어 운용한 것인데 그것을 정리해라, 언제까지 정리해라, 그 다음에 그 업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런 조치가 없음.
- ▶ (진술인) 그 당시에 징계를 하지 않았던 결과, 그다음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 징계를 하고 재무관리업무에서 아예 배제를 했다면 이후 횡령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인 부분이었음.
- (위원)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여쭙어 보겠음. 주식을 운용하는 것은 용인했는데 손실 난 것을 몰랐다는 주장인지? 아니면 주식을 운용하는 것도 몰랐다는 주장인지?
- ▶ (진술인) 그 당시에 주식을 취득했던 것을 몰랐음.
- (위원) 회사가 2020년 12월에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인지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지를 한 후에 회장에게 보고를 하

셨는지?

▶ (진술인)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 관여자들이 현재 회사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임. 저희가 월간실적 보고를 할 때 “평가손실이 났음.” 그렇게 보고가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자체가 누락됐다 안 됐다 하는 부분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음.

○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잔고증명서까지 위조를 했지 않은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다음에 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고, 한국거래소 공시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거래소 공시도 안 했음. 개인적인 비위행위로 본다면 굉장히 중대한 비위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오히려 12월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됨.

▶ (진술인) 해당 계좌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투자임. 건별로 투자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계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

던 사실에 대해서는 회사도 다 인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새로운 신규 본부장님이 오셔서 3분기 전에 주식계좌에 대해서 굳이 회사가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계좌의 주식을 전부 다 팔고 정리를 지시했던 사항이었고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계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반 보통예금으로 돌리라는 지시를 기본적으로 한 3~4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다가 12월쯤 되어서 왜 정리를 끝까지 안 하느냐고 독촉을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그런데 12월에 주식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회계처리지 않은지? 그런 회계처리를 회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지?

▶ (진술인)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회장 직함은 있지만 회장님이 보고라인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음.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4분기에 발견했다면 이것을 3분기에 소급해서 수정하지 않고 왜 4분기에 반영을 했느냐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판단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판단이 잘못 되었을 수 있고 수정은 다 했지만 그 당시에는 금액적 중요성이 크지 않아서 4분기에 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쭙겠음. 자료제출거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검토에 6개월씩이나 걸렸다는 것도, 이것

안 내려고 시간을 지체한 것 아닌지?

- ▶ (진술인) 일단, 자료제출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함. 하지만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감원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사항도 아니었음.
-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음. 자료제출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제출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이것은 공식적인 절차(process)임. 인적·물적자원이 다 제한되어 있음. 사실 이 조문의 취지가 적시에 제출하는 것임.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검토하면서 시간을 지체한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 ▶ (진술인)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의 발로라기보다는 제출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문제(issue)가 있고 법률자문과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문제이지,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 같음.
- (위원) 소극적으로 검토를 함으로써 시일을 오래 지체하는 것도 사실상 그런 의사가 있는 것 아닌지?
- ▶ (진술인) 그것이 많이 길어져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늦게 제출된 것도 아닌 것 같음. 그 지연으로 인해서 실

질적인 사실관계가 가려졌다든지 또는 왜곡된 것은 없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장) 제68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음.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하여 검찰고발조치를 검찰통보로 감경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69호 『삼정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70호 『삼덕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71호 『서현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72호 『선진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73호 『예일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74호 『정동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등 이상 6건을 일괄상

정하고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15시 54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임. 서현 소속 사원의 보유금지 주식 매매 건과 관련 회계법인의 독립성 준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로서 의견을 진술하게 되어 매우 송구함.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임. 첫째, 서현회계법인의 내부통제시스템 관련임. 서현의 내부통제시스템 일부가 2020년 당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위반 사실을 자체 발견하였음. 그래서 그 발견 후 바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며 작동하고 있음. 둘째, 서현이 추구하고 있는 경영철학에 대한 내용임. 서현은 2018년 출범 이래 사회적 신뢰. 즉, Public trust 제고를 경영철학으로 삼고 중형회계법인 중 거의 유일하게 인사/조직/자금/품질 등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원펄체제의 경영을 고수하고 있음.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통합관리와 품질경영을 달성하고자 부단한 투자와 노력을 해 오고 있음. 중견법인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 ERP시스템에 회사 이름이 국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된 회계사 분이 회사 이름을 영문으로 쓰는 바람에 그것이 확인이 안 되어 한 달 정도 가지고 있었지 않은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회계법인은 한달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 (진술인) 저희는 모든 파트너나 회계사에 대한 독립성 절차를 분기단위로 테스트를 하고 있음. 그래서 이 일이 있었던 분기에 저희 자체 모니터링 절차를 통해서 발견했음.

○ (위원) 그러면 2020년 9월14일에 주식을 처분했지 않은지?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이것을 확인하여 적발한 것은 언제인지?

▶ (진술인) 10월경임.

○ (위원) 적발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 (진술인) 그 당시품관실장이 스스로 이 건이 소액이고 단기간에 매각되었다고 생각하여 본인이 자체 판단을 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시 대표이사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았었음. 저희들이 어찌 되었든 2023년 4월부터 품질관리감리를 받을 때 이 사실을 자체 발견하여 보고를 드렸음. 그 이후에 저희가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실

시하였음. 다만, 시스템에 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당시 종목코드라든지 등을 기표해서 영문으로 넣든 국문으로 넣든 점검(check)이 되도록 당시에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 (위원) 지금 품관실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징계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자체 징계규정 같은 것이 내부적으로 있었는지?

▶ (진술인) 내부적으로 징계규정이 있고 징계위원회도 구성이 다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본인의 판단으로 그런 부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너무 아쉽게 생각함.

○ (위원) 알겠음.

○ (위원장) ★★★ 이분이 주식을 소유하면서 감사수행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 (진술인) 이 사람은 감사본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감사(engagement)를 수행하는 파트너는 아니고 전산감사를 담당하는 사람임. 그래서 IT Audit을 전문으로 해서 Journal entry test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결과를 감사팀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임.

○ (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업무에 참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 (진술인) 감사업무에 참여한 것임.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진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진술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비록 독립성 위배의 사안은 맞지만 예일회계법인에는 충분히 감경할만한 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추가감경 조치를 해 주십사 읍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음. 간단하게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일회계법인은 2005년에 설립되어 20년 동안 독립성 위배 사안으로 문제가 된 적은 이 건이 처음임. 그리고 이 사안은 임직원의 배우자가 1,500만 원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 1~2개월 정도 늦게 발견이 되어 그 자체가 독립성 위배가 되었던 사안임. 예일회계법인은 나름대로 독립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더 확실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2021년에 新독립시스템이라는 자체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음. 그래서 1~2년 정도 新독립성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이었었는데 개발이 완료되기 직전 1~2개월 사이에 이 사안이 발생한 것임.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적발되었고 적발된 이후에 바로 임직원의 배우자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처분했고 실제 이 처분하는 시점이라든지, 적발시점은 공식적인 회계감사업무 착수하기 이전이었음. 추가 감경사유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이 사안은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issue)였음.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내부통제시스템으로도 발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경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주장임. 두 번째는 독립성 위반이 발견된 다음에 회계법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최대한의 사후조치를 적절하게 했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음. 바로 매각했음. 발견한 그 이후에 금융감독원에 바로 보고했음.

○ (위원) 통상 중간감사는 언제쯤 실시하는지?

▶ (진술인) 중간감사는 8월~9월 정도에 보통 실시하는데 저희가 주식을 4월초에 매각했음. 저희가 주식을 4월초에 매각했고 중간감사는 9월에 실시했기 때문에 감사실하기 한참 전에 매각된 일임.

○ (위원) 통상적으로 금감원에 보고를 하면 약간 상식적으로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대상 회사한테 먼저 알리고 금감원에 얘기할 것 같은데, 회사에는 얘기를 안 하고 금감원에 먼저 보고를 했는지? 이것 때문에 감사계약이 되기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그런데 그것을 염려한다면 금감원에 보고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지?

▶ (진술인) 저희는 금감원에 수시보고 규정이 있고, 그 수시 보고를 안 하면 불이익(penalty)이 있음. 그래서 회계법인의 입장에서는 수시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수시보고를 계속적으로 확인(check)하고 수시보고사항

이 발생하면 바로 보고하는 절차를 취하게 됨. 회사에 통지 안 한 부분은 물론 회계법인의 불찰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외감법에 명시적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음.

○ (위원) 규정은 없지만 계약 해지의 이슈(issue)가 있지 않은지?

▶ (진술인) 맞음.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회사에 통지했을 텐데 저희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한 번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 일단, 저희가 그때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금감원에 수시보고를 하면 금감원이 회사에 통보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음.

○ (위원) 8월9일이면 이미 중간감사는 다 끝났을 때인지?

▶ (진술인) 중간감사가 아니고 반기검토임. 중간감사는 시작도 안 했음. 반기검토 부분이 마무리 단계였고 보고서 나가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음.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말씀드릴 사항은 제 부주의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함. 제가 보내드린 자

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재감사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재감사 업무를 수행한 시간 자체가 하루도 안 걸리는, 한 서너 시간 정도밖에 안 됐음. 그다음에 그 업무 자체도 어떠한 증빙이라든지 감사업무라기보다는 제시된 회계기준에 따라서 주식 내용이라든지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재감사 보고서를 발행할 때도 저희 심리실과 통화를 했음. 심리실에서도 아마 단순한 업무라서 제가 주식을 갖고 있던 것에 대한 인지가 없었던 것 같음. 어쨌든 부주의하기는 했지만 제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함.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중과실’보다는 ‘과실’로 경감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음.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기본적으로는 보고 올려주신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렇게 문제를 지적해도 전혀 크게 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다만, 조금씩 사안별로 약간씩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서현회계법인의 경우는 개인에 대해서는 고려 할 바가 없는 것 같은데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 회계사 같은 경우도 안건 4페이지 상단에 보면 감사계약 체결 이전에는 이메일을 통해 임직원의 독립성이나 법인의 사업적 이해관계 등을 점검하는 감사수임을 위한 사전 독립성 확인 절차를 수행했다는 말임. 그래서 감사계약 할 때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 알렸는데 ★★★ 이분이 어떤 경위가 됐든 주식을 매수해서, 그것도 왜 또 단기간 내에 팔았는지는 모르겠음. ○○○씨에 대해서 '중과실'로, ★★★과 같은 양정이어서 좀, 저는 직접 행위자와 같이 가는 것이 맞나 하는 고민이 있음. 그다음에 예일회계법인 같은 경우도, 이분은 전산시스템에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등록을 했었는지?

- (보고자) 등록했음.

- (위원) 그러면 예일회계법인이 감사계약 체결하기 전에 등록된 것을 확인해보면 이 주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그러면 예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음.
- (위원) 저도 서현회계법인의 경우 감사인에 대해서는 1단계 감경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 그다음에 예일회계법인 역시 마찬가지로인데 사원 배우자의 주식소유로 인한 위반이고 금액도 크지 않고 위반기간도 비교적 단기이고, 또 감사업무 착수 전에 주식을 전량매도 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일회계법인도 1단계 감경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 마지막 정동회계법인 ☆☆☆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현재 1단계 감경을 하셨는데 ☆☆☆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재발행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이고 또 재발행과 관련해서 추가감사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감

사보수도 받지 않았고 업무수행범위도 지분법 적용의 적정성 확인이라는 매우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1단계 추가감경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제 의견은 이상임.

- (위원) 저도 두 분 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함. 일단, 서현회계법인의 ○○○○ 업무수행이사의 경우는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시스템 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이지, 독립성 확인을 안한 것은 아님. 그래서 저도 한 단계 감경하는 의견을 드림. 서현회계법인도 한 단계 내리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일회계법인의 경우는 □□□ 파트너의 경우에는 등록을 했음. 그런데 그 당시 예일회계법인이나 서현회계법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시스템상의 한계임. 그러니까 이것이 종목별로 판별이 안 된다는 것이었음. 그래서 이것을 잡아내지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하고 시스템의 문제를 예일회계법인에만 국한해서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지 않나 해서 저도 감경하는 의견임. 마지막으로 ☆☆☆ 회계사에 대해서도 제한된 재감사 업무이기 때문에 한 단계 감경하는 의견을 드림.

- (보고자)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일회계법인은 공통시스템을 쓰지 않았고 자체개발한 시스템을 썼음. 그래서 ERP에 등록된 보유주식 현황은 엑셀파일로 내려받아서 점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음.

- (위원) 알겠음.

- (위원) 거기는 ☆☆☆☆☆이라는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은 아닌지?
- (보고자) 엑셀파일로 내려받은 다음에 ctrl + F로 해서 ☆☆☆☆☆이라고 입력을 하면 주식 검색이 가능함.
- (위원장) 제71호 안건의 서현회계법인과 ○○○ 회계사, 제73호 안건의 예일회계법인, 제74호 안건의 ☆☆☆ 회계사에 대해서는 중과실 5단계로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나머지 제69호 및 제70호, 제72호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의결 제71호, 제73호, 제74호는 각각 수정의결하고, 의결 제69호, 제70호, 제72호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제71호, 제73호, 제74호는 각각 수정의결, 제69호, 제70호, 제72호는 각각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4년도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